시·도 교육청 추진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

학원 눈치보다 무산될 판

임시회 심의 안건 제외 … 자동 폐기될 듯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이 추진한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제정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밤 12시까지 돼 있는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 운영·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 보류중이다.

이 조례는 최소한 이달 중 예정된 임시회 등에 상정돼야 통과가 가능하지만, 시·도 교육위원회 심의안건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5일과 21일 개회 예정인 시·도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조례는 교육위 관련 기구나 의정활동비 폐지조례 등 10여건이다. 이 가운데 학원교습시간 단축 조례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달부터 교육위원회를 대체할 시·도 의회가 개원되고, 7~8월에는 임시회 계획이 없는 만큼 학원시간 안건은 오는 8월 말 도교육위원회 폐지 및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 열린 제 209회 임시회에서 도 교육청이 교습시간 단축을 골자로 상정한 학원 운영·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 의결 여부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광주시교육위원회도 개정안 상정을 연기했었다.

당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원업계의 눈치보기에다 학원을 운영하는 동료 챙기기 등에서 조례 처리를 보류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선거에 광주·전남 교육위원은 9개 선거구(광주 4, 전남 5)에 7명이 출마해 1명이 당선됐다.

학원교습 시간 단축 조례가 폐기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시·도 의회에서 다시 다뤄야 하는 만큼 당분간 학원시간 단축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1일 취임하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습시간 제한에는 공감하지만, 고등학생 대상 학원 제한은 대입제도가 있는 한 편법을 양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광주·전남의 학원 규제대상은 광주가 학원 3764곳, 교습소 1488곳, 개인 과외 교습자 1944명 등 7196곳이며 전남은 학원 2962곳, 교습소 694곳, 개인과외 2462명 등 6118곳에 이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현역입니다" 광주·전남지역 1991년생 입영대상자들의 징병검사가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실시됐다. 인성·심리·신체검사로 진행되는 징병검사에서 1~3급 현역, 4급 공익근무요원, 5~6급은 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영산강 골재채취 사업

입찰 과정 '뒷돈' 수사

광주도시공사 직원 리베이트 요구 의혹

검찰이 영산강 골재채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광주시도시공사 직원의 '리베이트' 요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도시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골재채취 입찰에 참여한 D건설업체 대표 전모씨의 수사의뢰를 토대로 입찰과정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입찰공고 전날 도시공사 팀장인 K씨가 거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전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입찰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특정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도시공사 측에서 의도적으로 3차례나 입찰을 실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지목한 도시공사 직원 2명과 1, 2위 선정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시스템 분석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법원도 입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이유로 도시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선재성)는 전씨가 신청한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1차 입찰이 유효함에도 2, 3차 입찰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3차 입찰에 따른 절차를 속행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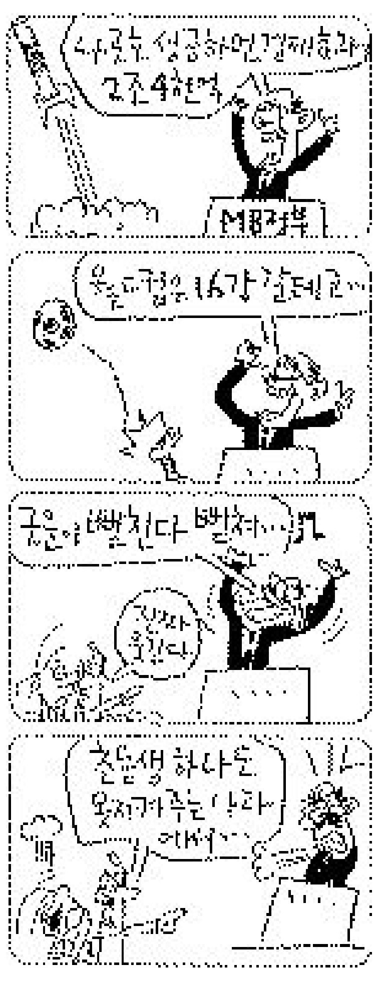
도시공사는 지난 3월30일 도시공사가 '영산강 원석선별 및 상차 대행사업 단가입찰 공고'를 낸 뒤 4월8일 1차 입찰을 실시했으나 도시공사 담당직원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코드번호를 잘못 입력해 입찰이 무산, 입찰기간을 두 차례 연기한 뒤 4월15일 제3차 입찰을 통해 S컨소시엄을 제1순위 협상적격업체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제3차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D업체 등 2곳이 법원에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도시공사는 이와 관련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업무미숙으로 인한 입찰과정에서 단순한 실수이며 이로 인해 물의를 빚어 유감"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즉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며, 전씨가 주장한 리베이트 요구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영산강 골재 채취사업=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바닥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채취해 운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의 대상지는 광주시 서구 용두동 13만여 ㎡이며, 사업비는 모두 116억원이 배정돼 관련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했다.

나우찬 〈8044〉 김종두



실종 40대 목포서 변사체로

지난 9일 오후 5시20분께 목포시 서산동 제5부두 인근 해상에서 한 남성의 변사체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순찰중이던 목포해양경찰 소속 경찰관이 발견했다. 해경조사 결과 이 남성은 6개월 전 목포시 하당동에서 회식을 한 뒤 귀가하지 않아 실종신고된 곽모(47)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 팔과 다리 등이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광주·전남 전교조 교사 5명 징계 고민

절차 곧 착수 … 서울시교육청은 16명 전원 징계 강행

서울시교육청이 정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전국교직원노조)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도 조만간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전까지 징계 보류를 희망했던 진보성향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10일 이성희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민주노동당에 활동비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속한 징계처리' 방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징계해야 한다.

교사 3명의 징계통보를 받은 광주시교육청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이들을 회부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중 2명이 징계시효 기간인 2년을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대상자 3명 중 2명이 마지막으로 활동비를 낸 시기가 2008년 1월 25일로, 그 기간에 당적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면 징계시효 기간 2년이 넘게 돼 징계를 할 수 없다"면서 "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징계회부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교사 2명의 징계 통보를 받은 전남도교육청은 빠르면 11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시·도 교육감 당선자들이 "(해당 교사들은) 아직 기소단계에 있을 뿐"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교과부의 뜻대로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군수 선거운동 공무원 둘 영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10일 6·2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 모 군청 공무원 김모(49·6급)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6·2 선거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에게 "군수후보로 출마한 현역 단체장을 지지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당 군수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보성 연쇄살인 어부 사형 확정

대법원 판결

법원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 이후 처음으로 '보성 어부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해 사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자신의 배에 탄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어부 오모(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지난 2008년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사형제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오씨는 지난 3월 속개된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지난 2007년 8월 31일 보성으로 여행온 10대 남·여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한 뒤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이어 오씨는 같은해 9월 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공부하기 싫어 학교에 불질러

쌍나팔

○…'학교가 불에 타버리면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10대가 덜미.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충동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광주 모 고교 2학년 박모(17)군은 휴일인 지난 6일 밤 9시께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교 교무실 창문 틈으로 불이 붙은 노트를 던져 불을 질렀으나 학교 경비원이 이를 발견해 곧바로 진화.

○…경찰에서 박군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일요일에 불을 지르면 다음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2011학년도-
대학편입
여름방학을 잡아라! 개강▶7월1일
수도권 주요대학 편입합격 대부분 - 여름방학이 당락을 좌우했다.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대비반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 www.kimyoung.co.kr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2-8088, 227-8088